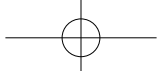


2026년 공동 정책포럼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범률과제**



2026년 공동 정책포럼

#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

## 프로그램 PROGRAM

**등록**

13:00~13:10

사회: 정지영(Hang Seng University)

**개회식**

13:10~13:40

개회사 ▶ 정성훈 회장(한국재무관리학회)

환영사 ▶ 김학석 회장(한국금융법학회)

축사 ▶ 정태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축사 ▶ 민병덕 의원(국회 정부위원회)

축사 ▶ 주병기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축사 ▶ 김영배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축사 ▶ 문대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사 ▶ 이현승 의장(한국자본시장포럼)

축사 ▶ 강정훈 은행장(IM뱅크)

기념사진 촬영\_전체

**주제발표**

14:00~15:30

주제 1 ▶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발표 ▶ 전성민 교수(가천대학교)

주제 2 ▶ K플랫폼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비용과 도전

-EU와 미국의 최근 플랫폼 규제에 관한  
입법 및 집행의 비교분석-

발표 ▶ 정혜련 교수(경찰대학교)

주제 3 ▶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전략

-포용적 성장에서 플랫폼의 중요성-

발표 ▶ 강형구 교수(한양대학교)

**패널토론**

15:40~16:40

좌장 ▶ 전상경 교수(한양대학교)

토론자 ▶ 고인혜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이종섭 교수(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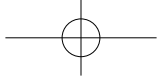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최영근 교수(상명대학교)

박성용 교수(웅지세무대학교)

한승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정주연 선임전문위원(스타트업얼라이언스)

토론의견 수렴 및 청중 질의응답



## 개회사

#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정성훈입니다.

바쁘신 국정과 공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 과제」 포럼에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럼을 공동으로 준비해 주신 김학석 한국금융법학회 회장님, 정태호 국회의원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민병덕 국회의원님, 김영배 국회의원님, 문대림국회의원님 그리고 강정훈 IM뱅크 은행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이제 개별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정책 집행에 따라 국가 경쟁력과 산업 질서가 결정되는 핵심 정책 영역이 되었습니다. 공정경쟁, 산업 육성, 수출 전략, 데이터와 자본시장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과제인 만큼, 오늘과 같은 국회·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먼저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님께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를 주제로 기초적인 문제의식을 제시해 주시고, 이어 정혜련 경찰대학교 교수님께서 「K플랫폼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 비용과 도전」을 주제로 EU와 미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집행을 비교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님께서 「상생수출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전략」을 통해 고용과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후 종합 토론에서는 조성진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공정거래과장님,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님, 최영근 상명대학교 교수님, 박성용 웅지세무대 교수님,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연구원님께서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정책적·실천적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학술 논의를 넘어, 국회의 입법과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재무관리학회 역시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든든한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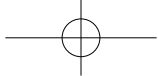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끝으로 다시 한 번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정성훈**





## 환영사

#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

입춘이 지나고 새로운 기운이 생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한국금융법학회와 함께 이번 공동 세미나를 기획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해 주실 공동 주최자 정성훈 한국재무관리학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주관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님, 그리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앞장 서시는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민병덕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문대림 의원님, 이현승 의원님, 그리고 금융 산업의 플랫폼 혁신을 이끄시는 강정훈 IM뱅크 은행장님의 참석은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를 넘어 국가 경제 시스템을 규정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은 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글로벌 수출을 통한 영토 확장'과 '소상공인과의 포용적 상생'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세 가지 주제는 대한민국 플랫폼 생태계가 마주한 가장 뜨거운 현안들입니다. 제1주제에서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거시적 흐름을 진단하고, 제2주제에서는 EU와 미국의 최신 입법 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K-플랫폼이 해외 시장에서 직면할 규제 비용과 법적 도전을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이어지는 제3주제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파도를 타고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생 전략과 법률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금융법학회는 그동안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법적 안정성과 혁신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재무적 효율성과 법적 정당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플랫폼 산업은 우리 학회가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 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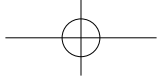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될 전문가분들의 해안이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실효성 있는 나침반이 되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무대를 향한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를 주관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한국금융법학회장 김학석**





## 축사

#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정태호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한국재무관리학회 정성훈 회장님, 한국금융법학회 김학석 회장님,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한양대학교 전상경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님, 경찰대학교 정혜련 교수님,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99%를 차지하며, 고용과 지역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자본과 정보, 기술과 신뢰의 격차는 수출에 대한 의지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을 국내 시장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이러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 수단을 넘어 인증·결제·물류·마케팅·금융을 통합한 '수출 인프라'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가장 현실적인 사다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잘 설계된 플랫폼은 1인 기업조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왔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진정한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생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구조의 불투명성, 데이터 접근의 비대칭, 알고리즘에 대한 일방적 종속은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그 위험이 중소상공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규칙과 신뢰 가능한 거버넌스가 없는 플랫폼은 포용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최근 글로벌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일본은 이미 플랫폼을 단순한 민간 비즈니스가 아닌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자산, 즉 '디지털 영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 정책은 공정거래의 문제를 넘어 산업·통상·안보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점에서 정부는 공정한 경쟁 질서와 신뢰의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플랫폼 기업은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역시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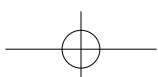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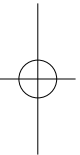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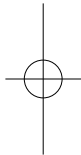
상생 없는 수출은 지속될 수 없고, 수출 없는 상생 또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국회와 정부, 민간이 함께 '상생을 통한 수출, 수출을 통한 상생'이라는 공통의 해법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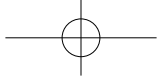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저 역시 오늘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다음 단계를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 태 호**





축사

##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

반갑습니다.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2026년 공동 정책포럼“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라는 뜻깊은 정책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석하신 학회와 학계·산업계·정책 현장의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경제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제 다소 늦은 진단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한가운데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은 물론이고,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이미 생산과 소비, 유통과 홍보, 노동과 수출의 방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플랫폼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작동하는 기본 질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과 법률 과제는 그래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의 문제이며,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지속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효율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효율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디지털 플랫폼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부담입니다. 온라인 주문, 배달, 광고, 리뷰 관리, 알고리즘 대응,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마케팅까지. 장사를 계속하기 위해선 이제는 플랫폼을 관리하는 일이 또 하나의 노동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을 높이기보다는 시간과 노력을 두 배로 소모하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플랫폼이 아니라, 더 잘 설계된 전환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앱을 하나 더 익히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중복되는 플랫폼을 줄이고 영업과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어야 합니다. 디지털은 사람을 바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오늘 포럼의 또 하나의 축은 수출입니다. K-콘텐츠와 K-상품은 이미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은 국경을 넘지만, 정보와 교섭력의 격차는 여전히 개인과 중소기업자에게 불리합니다. 이 지점에서 정책과 법의 역할은 분명해집니다. 플랫폼을 막을 것인가, 풀어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경제 속에서 누가 비용을 지고, 누가 위험을 떠안는가를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 투명한 기준, 그리고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구조, 이것이 곧 수출 경쟁력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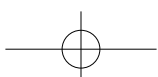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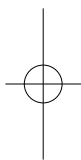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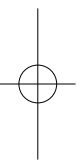
저는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서 디지털 플랫폼이 소수의 효율만 키우는 구조가 아니라, 다수의 생업과 노동, 그리고 수출의 기회를 넓히는 공공적 인프라로 작동하도록 입법과 정책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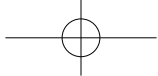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오늘 이 포럼이 상생과 수출이라는 두 목표를 대립이 아닌 구조적 해법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술은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사회의 방향으로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정치와 정책의 책임 있는 답변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그 답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민 병 덕**





**축사**

##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먼저 오늘 공동정책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재무관리학회 정성훈 회장님, 한국금융법학회 김학석 회장님,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행사 주최를 도와주신 정태호 의원님, 그리고 포럼에 참여하시는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사회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대전환기에 우리 경제가 '상생'과 '글로벌 경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은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되어 국민 생활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가 소비자, 중소기업, 자영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과 경영기반을 위협하는 문제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혁신과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이러한 공동 번영을 실현하는 공정한 시장 규칙을 설계하고 새로운 제도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플랫폼 생태계 내부의 공정한 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소 우리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혁신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혁신의 역동성은 살리되, 플랫폼 경제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처럼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국회, 산업계, 그리고 학계와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포럼이 디지털 플랫폼 정책 과제에 대한 귀중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모든 참여자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공정위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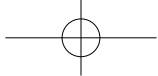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다시 한 번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 병 기**





**축사**

##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 과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 과제” 공동정책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하신 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금융법학회,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정태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국자본시장포럼, 한국지역경영원, 한국거래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은 개별 산업의 혁신 수단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 산업 주권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세계 각국은 자국의 디지털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보호·육성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 전략까지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을 다수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적 성과를 넘어,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주도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 기반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국내 플랫폼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개방과 경쟁의 원칙을 존중하되, 국내 플랫폼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고 중소 플랫폼과 소상공인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공공은 공정한 경쟁 질서와 신뢰의 기준을 세우고, 민간은 그 위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과 법률 과제들이 이러한 방향 속에서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국내에서는 공정하게 성장하고, 해외에서는 경쟁력 있는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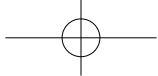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김 영 배**





축사

##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갑 국회의원 문대림입니다.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태호 의원님과 한국재무관리협회·한국금융법학회·공정거래 위원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플랫폼이 국가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은 비즈니스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디지털 공공 영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며, 성장의 결실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은 ‘억강부약(抑強扶弱)’의 정신에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이 시장의 질서를 주도하되,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든든한 상생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업입니다. 플랫폼 안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와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 전략은 우리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K-플랫폼 수출’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공정과 상생의 모델’을 세계에 선보이는 일이어야 합니다.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도전을 뒷받침하되, 그 혁신이 공동체의 가치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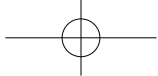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오늘 포럼에서 제시될 정책적 대안과 과제들은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장이 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국회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플랫폼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축사

##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



안녕하십니까, 한국자본시장포럼 의장 이현승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플랫폼이 단순한 시장 참여자를 넘어 국가 핵심 안보 자산이자 전략적 인프라로 기능하는 '국가플랫폼자본주의(SPC)'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 플랫폼 기업들의 '상생과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된 것을 자본시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받는 평가를 넘어,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어떻게 확장하고 내실을 다질지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서 나옵니다. 과거 소상공인들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자원의 한계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혀 성장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플랫폼은 이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I와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신용평가'는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견고한 '금융 사다리'를 놓아주고 있으며, '빠른 정산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은 소상공인들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고객과 연결되는 거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글로벌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국가권력이라는 '보이는 손'이 지배하는 전쟁터입니다. 미국은 틱톡을 통해, 일본은 라인 사태를 통해, 그리고 EU는 DMA(디지털시장법)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플랫폼을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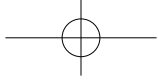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바로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 또한 플랫폼 기업을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행위 중심의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비로소 자본의 선순환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도출될 지혜들이 우리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소상공인들과 함께 도약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한국자본시장포럼 의장 이현승



**축사**

##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



존경하는 한국재무관리학회와 한국자본시장포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엠뱅크 은행장 강정훈입니다.

오늘 '상생과 수출 이중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라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로 뜻깊은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산업 간, 기업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강화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핵심 해법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성장이 개별 기업의 역량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금융, 데이터, 물류,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결이 원활해 질 때, 상생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강력한 경쟁력이 되고, 수출은 특정 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기회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금융과 자본시장은 이러한 플랫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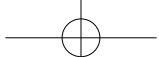
오늘의 포럼이 단순히 학술적인 담론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나누는 치열한 고민과 통찰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이어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의 고견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오늘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IM뱅크 은행장 강정훈**



2026년 공동 정책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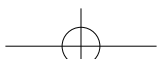
## 주제발표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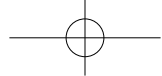
#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전성민** 교수  
(가천대학교)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





# 국가플랫폼자본주의(SPC) : 글로벌 플랫폼 주권 전쟁

202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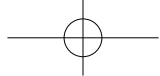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성민

## 1. 서론: 신(新)국가자본주의와 디지털 영토의 재편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6년 현재, 글로벌 디지털 경제는 과거의 '국경 없는 자유로운 인터넷(Borderless Internet)'이라는 이상주의적 기조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국가가 플랫폼을 통제하고 이를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하는 '국가플랫폼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SPC)'의 시대로 진입함. SPC는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자 안보 자산임을 전제로 하며, 국가는 이를 통해 데이터 주권, 경제적 이익, 그리고 군사-안보적 우위를 확보하려 함.<sup>1</sup>

본 보고서는 SPC 관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틱톡(TikTok) 강제 매각 및 규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그리고 일본의 라인야후(LY Corporation) 지분 조정 사태를 심층 분석한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지형의 변화는 한국의 토종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Naver)와 카카오(Kakao)에 실존적인 위협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생성형 AI(Generative AI)와 소버린 AI(Sovereign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2026년의 시점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책을 분석하고 제언함.



## 1.2. 국가플랫폼자본주의(SPC)의 이론적 함의

국가플랫폼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와 국가 주도형 발전 모델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융합된 형태이다. 이는 국가가 시장 규제자에서 나아가 생산자, 금융가, 그리고 플랫폼의 설계자로 직접 참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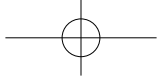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 **지정학적 도구화:** 플랫폼은 데이터의 수집과 통제, 여론 형성, 핵심 인프라 운영을 담당하므로, 국가는 이를 안보 자산으로 간주한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사실상 자국 플랫폼의 글로벌 지배력을 확장하고 상대국 플랫폼을 배제하는 '디지털 영토 전쟁'의 양상을 띤다.
- **인프라 권력:** 플랫폼은 벤자민 브라튼(Benjamin Bratton)이 제시한 '스택(The Stack)' 모델처럼 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주권 공간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 내 데이터가 흐르는 물리적 서버와 논리적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권력을 동원한다.<sup>1</sup>

구분	미국형 SPC	중국형 SPC	EU/일본형 SPC (방어적)
핵심 주체	민간 빅테크 + 안보 기관(DoD, CIA)	공산당-국가 + 국영/민간 플랫폼	규제 기관(EC, MIC)
통제 방식	법적 제재, 강제 매각, 기술 표준화	직접 소유, 공산당 조직 내재화, 관리방화벽	사전 규제(Ex-ante), 행정지도, 과징금
주요 목표	글로벌 기술 패권 유지, 안보	사회 통제, 디지털	데이터 주권 확보, 자국

3

	위협 제거	실크로드 확장	인프라 보호
--	-------	---------	--------

4



## 2. 미국의 틱톡(TikTok) 규제: 안보 논리와 강제 매각의 SPC 분석

### 2.1. 틱톡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안보화(Securitization)

미국의 틱톡 규제는 SPC의 가장 공격적인 형태로, '적성국 앱'에 대한 시장 접근을 차단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자유 무역의 원칙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한다는 '안보화(Securitization)' 논리가 디지털 경제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 2.1.1. 초기 시도와 실패 (2020-2023)

2020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틱톡 금지 행정명령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나, 이는 틱톡을 '데이터 유출의 통로'이자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규정하는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었으며, 틱톡이 제안한 데이터 격리 조치인 '텍사스 프로젝트(Project Texas)'—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오라클 서버에 저장하고 미국 법인의 감독을 받는 방식—는 미 의회와 행정부로부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sup>2</sup>

#### 2.1.2. PAFACAA 법안과 강제 매각 명령 (2024-2025)

2024년 제정된 '외국 적대국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미국인 보호법(PAFACAA)'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2025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에서의 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3</sup> 이 법안은 특정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 대법원에 의해 합헌으로 판결(2025년 1월 17일, *TikTok Inc. v. Garland*)되었다.<sup>3</sup> 대법원은 국가 안보 위협이 존재할 경우 의회가 외국 자본의 플랫폼 소유를 제한할

5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SPC의 법적 정당성을 완성하였다.<sup>5</sup>

### 2.2. 2026년 최종 딜 구조와 '틱톡 USDS'의 출범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집행이 수차례 연기(2025년 4월, 6월, 9월)된 끝에, 2026년 1월 22일을 기점으로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딜이 최종 완료되었다.<sup>3</sup>

#### 2.2.1. 소유 구조의 재편: 미국 자본의 지배

최종 타결된 딜에 따라 'TikTok USDS Joint Venture LLC'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 자본이 지배하는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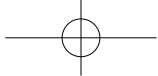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 **주요 주주:** 오라클(Oracle), 실버레이크(Silver Lake), 월마트(Walmart), 그리고 UAE 기반 투자사 MGX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과반 지분을 확보하였다.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MGX는 각각 15%의 지분을 보유하며, 바이트댄스는 19.9%의 지분만을 유지하되 의결권과 운영권은 제한된다.<sup>6</sup>
- **국가 안보 요건 충족:** 새로운 조인트 벤처의 이사회는 과반수가 미국인으로 구성되며, 미국 정부가 승인한 보안 위원회가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감독한다.<sup>7</sup>

#### 2.2.2. 기술적 통제권: 오라클의 감시 체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물리적, 논리적 통제권이 미국 기업인 오라클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 **데이터 호스팅:** 모든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OCI)에 독점적으로 저장되며, 중국으로의 데이터 유출 가능성은 원천 차단된다.<sup>7</sup>
- **알고리즘 검열:** 오라클은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 소스 코드를 검토하고, 알고리즘이 특정 정치적

6



목적(예: 중국 공산당의 선전)으로 조작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틱톡의 핵심 경쟁력인 '알고리즘'이 미국의 관리 감독 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sup>9</sup>

### 2.3. 시사점: '기술 주권'의 박탈과 글로벌 플랫폼 지형 변화

미국의 틱톡 규제 완료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려면,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통제권을 미국에 넘겨라."

이는 자유 무역 원칙의 후퇴이자, 플랫폼이 국가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되는 SPC의 심화를 보여준다. 틱톡 사례는 향후 중국뿐만 아니라, 데이터 안보가 중요시되는 모든 외국 플랫폼(한국 포함)에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되었다. 특히 틱톡 샵(TikTok Shop) 등 커머스 기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미국은 자국 유통망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강경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sup>10</sup>

7

## 3. EU의 빅테크 규제(DMA/DSA): 규제 권력을 통한 시장 재설계

### 3.1. DMA/DSA의 핵심 메커니즘과 '브뤼셀 효과'

EU는 자국 내 거대 플랫폼 기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적 규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를 통제하고 자국 디지털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규제 주권(Regulatory Sovereignty)'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를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라 부르며, EU의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sup>11</sup>

- 디지털시장법(DMA): 시장 지배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금지, 상호 운용성 보장, 데이터 결합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sup>12</sup>
- 디지털서비스법(DSA):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다. 위반 시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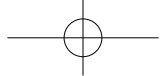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 3.2. 2025-2026년 규제 집행 현황과 갈등

2026년 현재, DMA와 DSA는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 3.2.1. 게이트키퍼 지정 및 해제 동향

- 지정 대상: 알파벳(Google),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이 최초 지정되었으며, 2024년 5월 부킹닷컴(Booking.com)이 추가되었다.<sup>16</sup>
- 애플 iPadOS 지정: 2024년 4월, 애플의 iPadOS가 게이트키퍼로 추가 지정되어, 아이패드에서도

8



타사 앱스토어 설치(사이드로딩)가 허용되었다.<sup>16</sup>

- **삼성전자 제외:** 삼성전자는 브라우저 점유율 등의 기준 미달로 게이트키퍼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나, EU 집행위는 삼성의 생태계 확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sup>17</sup>
- **메타 마켓플레이스 해제:** 2025년 4월, 메타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시장 지배력 요건 미달로 게이트키퍼 지정이 해제되는 등 규제 적용이 동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16</sup>

### 3.2.2. 미-EU 규제 갈등의 심화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미국은 EU의 DMA/DSA를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무역 보복 위협:** 2025년 USTR 보고서는 DMA/DSA를 '불공정 무역 장벽'으로 명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디지털 규제에 대응하여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사하고,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관세를 위협했다.<sup>11</sup>
- **로비와 압박:**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밀월 관계를 통해 EU의 규제 집행을 약화시키려는 로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대서양 간 기술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sup>19</sup>

### 3.3. 한국 플랫폼에 대한 파급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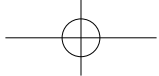
EU의 규제는 한국 플랫폼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네이버, 카카오는 매출 및 이용자 수 기준 미달), 간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규제 모델의 확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EU DMA를 벤치마킹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반발로 철회했으나, 여전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유사한 규제 효과(지배적 사업자 추정)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sup>20</sup>

9

- **글로벌 진출 장벽:** 네이버(웹툰, 제페토)나 카카오(픽코마)가 유럽 시장으로 확장할 경우, DSA의 엄격한 유해 콘텐츠 관리 의무(불법 콘텐츠 신속 제거, 알고리즘 설명 책임 등)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막대한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sup>11</sup>

10



## 4. 일본의 라인야후(Line Yahoo) 사태: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한 자본 재편

### 4.1. 사태의 발단과 전개: 보안 사고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2023년 11월 발생한 네이버클라우드 위탁 서버 해킹으로 인한 라인(LINE) 사용자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명분으로 활용되었다.<sup>22</sup>

#### 4.1.1.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2024)

일본 총무성(MIC)은 2024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이례적인 행정지도를 내렸다. 핵심은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본 관계를 포함한 경영 체제를 재검토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민간 기업의 자본 구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 전례 없는 조치로, SPC의 '국가 개입' 특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sup>24</sup>

#### 4.1.2.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협상 및 결과 (2025-2026)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지분 50:50)의 지분 조정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 단기적 지분 매각 보류: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단기적인 지분 매각은 없다"고 선언하며, 헐값 매각 우려와 기술 주권 상실에 대한 국내 여론을 의식해 버티기 전략을 구사했다.<sup>26</sup>
- 시스템 분리 가속화: 대신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기술적 연결 고리를 끊는 데 속도를 냈다. 당초 2026년으로 예정되었던 시스템 분리 완료 시점이 2025년 12월(일부 시스템) 및 2026년 3월로

11

앞당겨졌다.<sup>28</sup>

- 서비스 재편: 라인야후는 네이버 기술 기반의 '라인 페이(Line Pay)' 서비스를 2025년 4월 종료하고, 소프트뱅크 계열의 '페이페이(PayPay)'로 통합했다. 이는 라인 플랫폼 내에서 네이버의 기술적 DNA를 지우고 소프트뱅크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이다.<sup>29</sup>

### 4.2. SPC 관점에서의 분석: 플랫폼 국유화와 데이터 주권

일본의 조치는 라인을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행정, 방재, 금융을 아우르는 '국가 공공재'로 인식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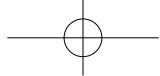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1. 디지털 인프라의 안보화: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네이버)이 일본 국민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통제하는 상황을 '경제 안보 리스크'로 규정했다. 이는 기술적 보안 문제를 자본 소유 구조(Governance)의 문제로 치환하여, 외국 자본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SPC 전략이다.<sup>30</sup>
2. 기술 내재화와 종속 탈피: 라인야후 사태의 본질은 일본이 자국 내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인 라인을 사실상 '일본 기업화'하여 데이터 주권을 회복하려는 데 있다. 네이버는 13년간 키워온 라인의 기술적 통제권을 상실하고,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로 전략할 위기에 처했다.<sup>32</sup>

### 4.3. 한국 기업에 대한 파급 효과

라인야후 사태는 "기술력이 있어도 플랫폼의 국적(주권)이 다르다면 언제든 축출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 해외 확장의 지정학적 리스크: 네이버의 사우디 프로젝트나 카카오의 해외 진출 시, 현지 정부가 언제든 '안보'를 이유로 경영권이나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업의 개별적

12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외교적 지원(G2G)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sup>33</sup>

13

## 5. 한국 상황 분석: 샌드위치 위기와 소버린 AI로의 전환

### 5.1. 이중고(Double Bind)에 빠진 한국 플랫폼

한국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가 장악하지 못한 몇 안 되는 '독자 플랫폼 보유국'이나, 현재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 미국의 통상 압박: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와 USTR은 한국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미국 기업(구글, 애플 등)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라고 비판하며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sup>34</sup> 이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운신의 폭을 극도로 제약한다.
- 국내 규제의 역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려 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집행력이 미치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만 옥죄고, 해외 빅테크에는 면죄부를 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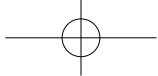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 5.2. 2026년 한국 정부의 AI 및 플랫폼 정책 대전환

이재명 정부(2026년 기준 시나리오)는 'AI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며, 플랫폼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AI 산업 육성으로 정책의 무게추를 이동시켰다.<sup>36</sup>

#### 5.2.1. 역대 최대 규모의 AI 예산과 인프라 구축

- AI 예산 10.1조 원 편성: 2026년 예산안에서 AI 관련 투자를 전년 대비 3배 증액한 10.1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단순한 R&D를 넘어, AI를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과 결합하는 'AI 전환(AX)'에 집중된다.<sup>37</sup>
-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14



통해 2026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엔비디아 GPU(H200/B200) 및 국산 NPU 기반의 대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sup>39</sup> 이는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인프라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여 소버린 AI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SPC적 접근이다.

### 5.2.2. 플랫폼 규제법의 수정 (KFTC의 후퇴)

- **사전 지정제 폐기:** 공정위는 당초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사전 지정제)'이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2024년 9월 이를 공식 철회했다.<sup>20</sup>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이용자 1천만 명, 점유율 60% 이상 등)을 신설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규제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학계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sup>21</sup>

## 5.3. 기업별 대응 전략: 소버린 AI와 글로벌 확장

### 5.3.1. 네이버: '소버린 AI' 수출과 중동 공략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 X)'를 중심으로 자국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소버린 AI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비영어권 국가에 수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MOMRAH)와 협력하여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2025-2026년에는 사우디 맞춤형 아랍어 LLM 개발 및 데이터센터 구축 등 '소버린 AI 패키지' 수출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sup>42</sup> 이는 라인야후 사태로 잃은 일본 시장의 대안을 중동에서 찾으려는 시도다.
- **인프라 투자:** 2026년까지 세종 각(GAK)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GPU 확보에 1조 원을 투자하며,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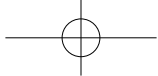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AI 안전성 프레임워크(ASF)'를 발표하여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sup>41</sup>

### 5.3.2. 카카오: 생활 밀착형 AI와 헬스케어 확장

카카오는 거대 언어 모델 경쟁보다는,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활용한 실용적 AI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 **에이전트 AI (Agentic AI):** 2026년을 기점으로 카카오톡 내에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쇼핑, 예약, 상담 등을 수행하는 'AI 쇼핑 에이전트' 등을 도입하여 수익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sup>45</sup>
- **헬스케어 글로벌 진출:** 카카오펠스케어는 텍스콤(Dexcom)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여 연속혈당측정기(CGM)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국내외로 확장하고 있다.<sup>46</sup>

16



## 6. 한국 토종 플랫폼 기업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 정책

미국, EU, 일본의 SPC 동향과 한국의 현실을 종합할 때, 한국 정부와 기업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략적 육성 및 보호'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 6.1. 정부(Government) 차원의 대응 정책

#### ① 디지털 영토 수호 및 경제 안보 전략 격상

- 플랫폼의 전략 자산화: 플랫폼 기업을 단순한 온라인 사업자가 아닌 반도체·배터리와 동등한 '국가 전략 기술' 보유군으로 지정하여, R&D 세제 혜택(최대 30~40%) 및 데이터센터용 전력 우선 공급을 법제화함.
- 범정부 대응 체계 구축: 라인야후 사태와 같은 해외발 플랫폼 침탈 시, 과기정통부(기술)·외교부(협상)·산업부(통상)가 즉각 가동되는 '디지털 경제 안보 컨트롤타워'를 상설화하고, 데이터 주권 침해를 핵심 외교 의제로 격상함.
- 상호주의 기반 규제 집행: 국내 기업에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빅테크의 국내 매출 및 수익 구조 신고를 의무화하고, 망 사용자 무임승차 방지법을 통상 마찰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입법 추진함.

#### ② 소버린 AI(Sovereign AI) 생태계 집중 육성

- 공공 부문의 국산 AI 우선 도입 (AI Buy Korea): 행정, 국방, 법률 등 민감한 공공 데이터 처리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등 국산 LLM 도입을 의무화(Quota제)하여,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레퍼런스(Track Record)를 확보해 줌.<sup>47</sup>
- 국가 AI 인프라 바우처 대폭 확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네이버·카카오의 클라우드 및 AI API를

17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에 반영된 1조 원 규모의 컴퓨팅 자원 지원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대상을 확대함.<sup>38</sup>

- AI 리터러시 및 인재 양성: 전 국민 대상 AI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AI 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을 집중하여 인력난을 해소함.

#### ③ 규제 정책의 전략적 재설계 (Better Regulation)

- 사전 규제(PCPA)의 전면 재검토: EU DMA를 모방한 획일적인 사전 규제는 국내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하므로 철회하고, 현행 공정거래법 내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사후 처벌을 강화하고 입증 책임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선진화함.<sup>35</sup>
-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조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 규제의 기준을 '국적'이 아닌 '행위(Behavior)' 중심으로 명확히 하고, 미국 상무부 및 USTR과의 정례적인 디지털 통상 채널을 가동하여 오해를 불식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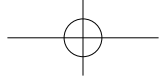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 6.2. 기업(Corporate) 차원의 대응 전략

#### ① 글로벌향 '소버린 AI' 수출 모델 확립

- 비영여권 국가 타겟팅: 미국/중국 기술 종속을 우려하는 아랍권, 동남아, 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소버린 클라우드 + LLM' 패키지 수출을 주력 사업화함 (예: 네이버-사우디 모델의 확산).<sup>42</sup>
- 버티컬 AI(Vertical AI) 특화: 범용 LLM 경쟁보다는 각국의 법률, 의료, 공공행정 등 특수 도메인에 최적화된 버티컬 AI 솔루션을 개발하여, 글로벌 빅테크가 침투하기 어려운 틈새시장을 선점함.

#### ② 기술적 독립성 및 보안 거버넌스 강화

18



- 지배구조 리스크 헷지(Hedge): 해외 합작 법인(JV) 설립 시, 라인야후 사태를 교훈 삼아 기술 소유권(IP)과 데이터 통제권을 명확히 하는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현지 정부의 국유화 시도에 대비한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조항을 마련함.
-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구축: 해킹 사고가 경영권 분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ISO, FedRAMP 등)을 획득하고, 보안을 비용이 아닌 핵심 경쟁력으로 내재화함.<sup>48</sup>

### ③ 상생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우군 확보

- SME와의 디지털 동맹 강화: 플랫폼의 성장이 중소기업인의 매출 증대로 직결되는 상생 모델(예: 네이버 프로젝트 꽃)을 고도화하고, 이를 데이터로 입증하여 무분별한 '플랫폼 때리기' 여론을 방어함.
-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CVC)와 M&A를 활성화하여, 네이버/카카오 중심의 견고한 'K-플랫폼 연합군'을 형성해 글로벌 빅테크의 공습에 공동 대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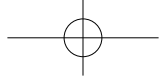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19

## 7. 결론

2026년의 글로벌 디지털 지형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보이는 주먹(국가 권력)'이 작용하는 전장(Battlefield)으로 변모했다. 미국은 틱톡을 통해, EU는 DMA를 통해, 일본은 라인 사태를 통해 각자의 SPC 전략을 구사하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자국 플랫폼 생태계를 보유한 희소한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버린 AI'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며, 기업은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의 '디지털 영토 확장'을 통해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 "플랫폼이 없으면 데이터도, AI도, 미래 산업의 주권도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20



### 글로벌 SPC 규제 비교 및 한국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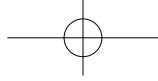
구분	미국 (TikTok)	EU (DMA/DSA)	일본 (Line-Yahoo)	한국 (현황 및 과제)
규제 동기	국가 안보 (데이터 유출)	시장 경쟁 (독점 방지)	경제 안보 (인프라 장악)	소비자 보호 vs 산업 육성 (혼재)
주요 수단	강제 매각, 앱 금지	사전 지정, 과징금	행정지도, 자본 재판	공정거래법 개정 (지배적 사업자)
타겟 대상	중국 (ByteDance)	미국 (GAFAM) + 중국	한국 (Naver)	국내 (Naver, Kakao) > 해외 빅테크
시사점	자본 국적 = 안보 리스크	규제가 곧 글로벌 표준	기술만으론 경영권 방어 불가	역차별 해소 및 소버린 AI 육성 시급

21

### 참고 자료

1. 국가플랫폼자본주의.docx
2. U.S. TikTok Ban: National Security and Civil Liberties Concerns - The Henry M. 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ttps://jsis.washington.edu/news/u-s-tiktok-ban-national-security-and-civil-liberties-concerns/>
3. Congress Must Demand the Full Details of the TikTok Deal -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https://www.americanprogress.org/article/congress-must-demand-the-full-details-of-the-tiktok-deal/>
4. Saving TikTok While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saving-tiktok-while-protecting-national-security/>
5. 24-656 TikTok Inc. v. Garland (01/17/2025) - Supreme Court,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4pdf/24-656\\_ca7d.pdf](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4pdf/24-656_ca7d.pdf)
6. TikTok inks deal with investors to keep operating in U.S. | CBC News, <https://www.cbc.ca/news/business/tiktok-us-sale-deal-9.7021992>
7. TikTok signs deal to sell U.S. unit to American investors, including Oracle and Silver Lake, <https://www.pbs.org/newshour/economy/tiktok-signs-deal-to-sell-u-s-unit-to-american-investors-including-oracle-and-silver-lake>
8. TikTok signs deal to form new US unit with investors, including Oracle, Silver Lake, <https://apnews.com/article/tiktok-divestment-deal-trump-2fdb915cac5b6d06907a5a>

22



[2de6764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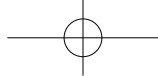
9. TikTok signs deal for sale of U.S. entity to American investors – CBS News, <https://www.cbsnews.com/news/tiktok-signs-deal-for-sale-to-us-entity/>
10. TikTok completes transition to shopping-focused platform – The American Bazaar, <https://americanbazaaronline.com/2026/01/02/tiktok-completes-transition-to-shopping-focused-platform-472494/>
11. The EU's Digital Markets Act and Digital Services Act – German Marshall Fund, <https://www.gmfus.org/news/eus-digital-markets-act-and-digital-services-act>
12. Digital Markets Act (DMA) – European Union, [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index\\_en](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index_en)
13. Digital Markets Act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Digital\\_Markets\\_Act](https://en.wikipedia.org/wiki/Digital_Markets_Act)
14. The Digital Services Act: Practical Implications for Online Services and Platforms – Latham & Watkins LLP, <https://www.lw.com/admin/upload/SiteAttachments/Digital-Services-Act-Practical-Implications-for-Online-Services-and-Platforms.pdf>
15. Digital Services Act: keeping us safe online – European Commission, [https://commission.europa.eu/news-and-media/news/digital-services-act-keeping-us-safe-online-2025-09-22\\_en](https://commission.europa.eu/news-and-media/news/digital-services-act-keeping-us-safe-online-2025-09-22_en)
16. DMA designated Gatekeepers – Digital Markets Act, [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gatekeepers\\_en](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gatekeepers_en)
17. 22 Core Platform Services For 6 Gatekeepers: The European Commission Issues its Preliminary View on the DMA's Designation Process | Kluwer Competition Law Blog, <https://legalblogs.wolterskluwer.com/competition-blog/22-core-platform-services-fo>

23

[r-6-gatekeepers-the-european-commission-issues-its-preliminary-view-on-the-dmas-designation-process/](#)

18. Digital Markets Act Roundup: December 2024 – January 2025 | TechPolicy.Press, <https://www.techpolicy.press/digital-markets-act-roundup-december-2024january-2025/>
19. Big Tech Is Avoiding Responsibility – Here Is What the EU Can Do About It, <https://europeandemocracyhub.epd.eu/big-tech-is-avoiding-responsibility/>
20. Lessons from Korea's Roller-Coaster Ride Toward Platform (Non)Regulation, <https://truthonthemarket.com/2024/09/25/lessons-from-koreas-roller-coaster-ride-toward-platform-nonregulation/>
21. 새소식 ( 언론보도 ) 게시판읽기 ( The Future of the Online Platform Regulation Act in South Korea ) | 고대법대 - 고려대학교, <https://lawschool.korea.ac.kr/law/press.do?mode=view&articleNo=782760>
22. Administrative guidance to Yahoo Japan Corporation,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eng/pressrelease/2023/8/30\\_3.html](https://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eng/pressrelease/2023/8/30_3.html)
23. Japan's move to force Naver to sell LINE Yahoo stakes faces criticism, <https://www.chosun.com/english/industry-en/2024/05/09/DTB4ONX4NZFKJMLRHGTDRJ2NLI/>
24. Japan's request for Naver to shed Line control 'unprecedented': CEO – KED Global, <https://www.kedglobal.com/business-politics/newsView/ked202405030019>
25. Drawing the Line: Japan's Crackdown on Messenger App Signals Need for International Digital Rules –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https://keia.org/the-peninsula/drawing-the-line-japans-crackdown-on-messenger-app-signals-need-for-international-digital-rules/>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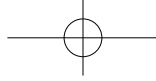


26. Stalled talks for Line stake sale: Boon or bane for Naver? – THE INVESTOR,  
<https://www.theinvestor.co.kr/article/3429135>
27. Naver won't shed Line Yahoo equity in short term,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4-07-02/business/industry/Naver-won-t-shed-Line-Yahoo-equity-in-short-term/2081627>
28. Report Submitted on March 31, 2025 in Response to MIC's Administrative Guidance on March 5 and April 16, 2024 (Summary) – LY Corporation,  
[https://www.lycorp.co.jp/en/news/2025/20250331\\_1\\_appendix\\_en.pdf](https://www.lycorp.co.jp/en/news/2025/20250331_1_appendix_en.pdf)
29. Line Yahoo to sever tech ties with Naver by year-end: LY CEO – KED Global,  
<https://www.kedglobal.com/business-politics/newsView/ked202406190005>
30. Economic security vs economic coercion and data protection vs data protectionism: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of the LINE Issue for Korea and middle powers – Real Instituto Elcano,  
<https://www.realinstitutoelcano.org/en/analyses/consequences-and-implications-of-the-line-issue-for-korea-and-middle-powers/>
31. PacNet#40 – Japan-Korea LINE conflict is more about data sovereignty – Pacific Forum,  
<https://pacforum.org/publications/pacnet40-japan-korea-line-conflict-is-more-about-data-sovereignty/>
32. Is Japan about to snatch control of Line messenger from Korea's Naver? – Hankyoreh,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1138324.html](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1138324.html)
33. Naver seeks to win Saudi megaprojects – The Korea Times,  
<https://www.koreatimes.co.kr/business/companies/20230705/naver-seeks-to-win-saudi-megaprojects>

25

34. July 24, 2025 Han Ki-jeong Chairman Korea Fair Trade Commission 95 Dasom 3-ro Sejong-si 30108 South Korea – House Judiciary Committee,  
<https://judiciary.house.gov/sites/evo-subsites/republicans-judiciary.house.gov/files/evo-media-document/2025-07-24-idx-sf-to-han-ki-jeong-kftc.pdf>
35. Better Regulation, Not More: Rethinking Korea's Competition Policy for the Next Decade,  
<https://itif.org/publications/2025/11/03/better-regulation-not-more-rethinking-korea-as-competition-policy-for-the-next-decade/>
36. Assembly passes 2026 budget on time after rare bipartisan deal – The Korea Herald,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627966>
37. President announces \$506 billion budget for 2026 with focus on 'AI era',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5-11-04/national/politics/President-announces-506-billion-budget-for-2026-with-focus-on-AI-era/2436568>
38. President Lee: 2026 budget request of KRW 728T 'to open AI era' – Korea.net,  
<https://www.korea.net/NewsFocus/policies/view?articleId=281702>
39. NVIDIA, South Korea Government and Industrial Giants Build AI Infrastructure and Ecosystem to Fuel Korea Innovation, Industries and Jobs | NVIDIA Newsroom,  
<https://nvidianews.nvidia.com/news/south-korea-ai-infrastructure>
40. GPU Procurement Project (First Supplementary Budget, KRW 1.46 Trillion) Selects Participant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eng/bbs/view.do?sCode=eng&mId=4&mPid=2&pageIndex=&bbsSeqNo=42&nttSeqNo=1155&searchOpt=ALL&searchTxt=>
41. Unveiling Two Pillars of AI Strategy from Services to B2B, Focusing on “Agent N” and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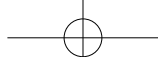


- AX for Manufacturing – Naver,  
<https://www.naver.com/en/media/pressReleasesDetail?seq=33540>
42. Naver expedites AI, digital infrastructure biz in Saudi Arabia – The Korea Times,  
<https://www.koreatimes.co.kr/business/tech-science/20251121/naver-expedites-ai-digital-infrastructure-biz-in-saudi-arabia>
43. Team Naver showcases AI value chain at Saudi IT exhibition LEAP 2025 – CHOSUNBIZ,  
<https://biz.chosun.com/en/en-it/2025/02/04/YKZSA6X54BHKJCHAOT3RFZ44BM/>
44. NAVER CEO Choi Soo-yeon Appointed to UN Global Compact Board of Director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Partnerships for "AI Governance" – Barchart.com,  
<https://www.barchart.com/story/news/34877231/naver-ceo-choi-soo-yeon-appointed-to-un-global-compact-board-of-directors-strengthening-international-partnerships-for-ai-governance>
45. Naver, Kakao gear up for agentic AI era in 2026 – The Korea Times,  
<https://www.koreatimes.co.kr/business/tech-science/20260102/naver-kakao-gear-up-for-agentic-ai-era-in-2026>
46. Kakao Healthcare secures exclusive Dexcom CGM distribution in South Korea – Chosunbiz,  
<https://biz.chosun.com/en/en-science/2025/12/12/I7C4B7OK6JH2XEXPPTU3TWOCXU/>
47. How newly revised AI Basic Act will reshape Korea's AI landscape – The Korea Times,  
<https://www.koreatimes.co.kr/business/tech-science/20260102/how-newly-revised-ai-basic-act-will-reshape-koreas-ai-landscape>

27

48. LINE Yahoo's progress report o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concerning data leaks | by Norbert Gehrke | Tokyo FinTech | Medium,  
<https://medium.com/tokyo-fintech/line-yahoos-progress-report-on-the-administrative-guidance-concerning-data-leaks-da5492af566a>

28



## 주제발표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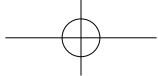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 K플랫폼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비용과 도전



정혜련 교수  
(경찰대학교)

##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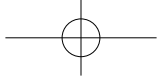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 플랫폼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방안과 도전

최근 주요국의 미디어플랫폼 규제에 관한 입법 및 집행의 비교분석

정혜련 교수(법학박사,SJD/방송통신법,경제법) |  
경찰대학 법학과

- 1 서론
- 2 통신미디어 플랫폼 및 산업의 개념과 특징
- 3 주요국 입법 및 규제동향 (EU·미국·일본·한국)
- 4 비교 및 분석: 세 가지 규제 철학의 대비(제도적 대응 및 정책 방향)
- 5 결론 및 정책 제언
- Q Q&A

2



## 1. 서론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방송미디어통신 시장의 플랫폼화 (Platformization of Media) - 유통·소비 전 과정의 플랫폼 지배

통신미디어의 공공성과 상업성 사이 구조적 긴장 심화

시장집중·공정보상 체계 붕괴·사회적 해악(가짜뉴스·혐오 표현 등) 가속화

유럽연합, 미국, 일본, 한국의 입법·정책

플랫폼은 커뮤니케이션·정보유통 방식 자체를 재편하여 사회·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공론장의 관문(Gatekeeper)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플랫폼 경제

디지털 플랫폼이 촉진하는 경제·사회 활동

### 공공성

미디어의 사회적 가치와 정보 다양성

### 상업성

이윤 추구와 알고리즘 기반 수익화

### 시장집중

플랫폼 자본의 지배력과 독점화 문제

3

## 2. 통신미디어 플랫폼 산업 정의 및 특징

정의: 온라인 플랫폼이 방송미디어통신을 아우르며 생산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 구조

구조적 특징: 참여자 증가에 따라 가치가 증대되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양면시장(two-sided market) 구조

기술적 기반: 알고리즘·데이터 중심 운영, 맞춤형 추천, 자동화된 콘텐츠 유통

가치사슬 변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플랫폼화 (platformization of media)

시장 집중 메커니즘:  
플랫폼 산업은 초기 이용자가 빠르게 몰리는 쓸림(tipping) 현상이 나타나며, 한계비용이 낮아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자연독점 구조를 형성한다.

초기 이용자 ↑ → 가치 ↑ → 더 많은 이용자 유입 ↑ → 경쟁 약화(독점화)

### 다면시장 (Multi-sided market)

콘텐츠 제작자, 이용자, 광고주 등 다양한 집단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 구조

### 네트워크 효과 (Network effect)

사용자 증가에 비례하여 플랫폼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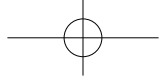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 알고리즘·데이터 기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자동화된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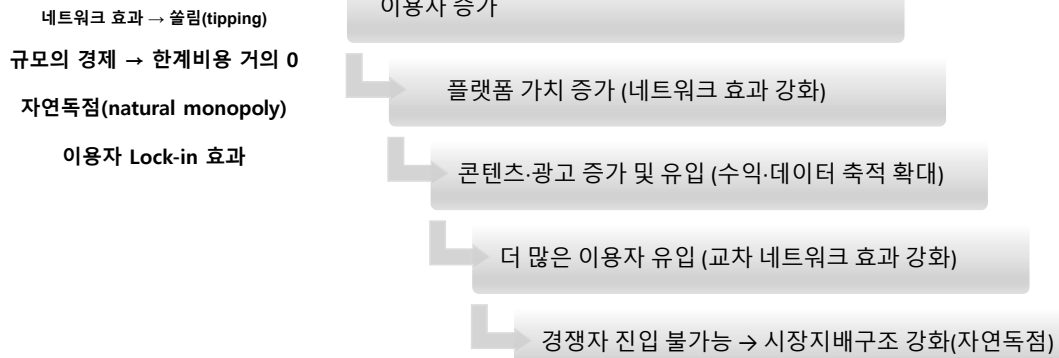
### 플랫폼화 (Platformization)

미디어 생태계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이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

5



## 2. 통신미디어플랫폼 시장의 특징: 다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



## 2. 통신미디어플랫폼시장의 특징: 미디어의 공공재 성격과 시장실패

공공재(public good)로서의 미디어: 비경합성(소비해도 감소하지 않음)과 비배제성(대가 지불 없이도 소비 가능)

시장실패: 양질의 뉴스·정보의 과소생산 현상 발생

시장에만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될 우려 (사적 이윤만으로 충분한 공급 불가)

정책적 함의: 공적 지원, 편집 독립성 보장, 정보 접근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 필요

미디어는 공공재적 특성 때문에 시장에만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공영방송 지원·편성 의무 등 제도적 개입의 근거가 되어 왔음

### 비경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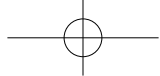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Non-rivalry)

### 비배제성

대가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  
(Non-excludability)

### 공공재 특성의 미디어

7



## 2. 통신미디어 플랫폼의 특징: 플랫폼화의 부작용: 공공성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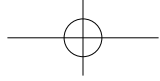
플랫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재편되면서 미디어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사용자 참여와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알고리즘 목표는 공론장의 질을 저하시키고, 미디어 본연의 정보 제공 및 감시 기능을 약화

<p><b>알고리즘 편향과 필터 버블</b></p> <p>사용자의 이탈을 막고 참여도를 극대화하려는 플랫폼 알고리즘은 이용자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p> <p><i>유튜브의 AI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잘못된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영상 시청을 시작하면 이후에도 유사한 콘텐츠 위주로 계속 추천함으로써, 이용자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확인되었다.</i></p>	<p><b>메아리 울림통 현상</b></p> <p>이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콘텐츠와 유사한 내용만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어 다양한 견해나 정보에 접촉할 기회를 잃고 메아리 울림통(echo chamber)에 갇힐 위험이 커짐</p> <p><i>이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콘텐츠와 유사한 내용만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어 다양한 견해나 정보에 접촉할 기회를 잃고 메아리 울림통(echo chamber)에 갇힐 위험이 커진다.</i></p>
<p><b>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확산</b></p> <p>알고리즘 편향은 가짜뉴스 및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증폭시켜 미디어의 여론 형성 기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p> <p><i>유튜브의 AI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잘못된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영상 시청을 시작하면 이후에도 유사한 콘텐츠 위주로 계속 추천함으로써, 이용자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확인되었다.</i></p>	<p><b>사회적 여론 양극화</b></p> <p>메아리 울림통과 필터 버블 현상으로 인한 알고리즘 편향은 사회적 여론 양극화를 심화시켜 민주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p> <p><i>이러한 알고리즘 편향은 사회적 여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가짜뉴스 및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증폭시켜 미디어의 여론 형성 기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i></p>
<p><b>시장 지배력 집중과 다양성 훼손</b></p> <p>플랫폼 미디어산업은 특성상 승자독식 구조로 흐르기 쉽고, 소수의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두 기업이 사실상 정보 유통을 장악하게 되면 미디어 다양성과 접근의 공정성이 위축될 위험</p> <p><i>시장 지배적 플랫폼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콘텐츠를 우대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글로벌 OTT 플랫폼이 막대한 트레이픽을 유발하면서도 영 이용대가를 회피하는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다.</i></p>	

## 구조적 딜레마

통신미디어 시장의 플랫폼화는 유통·소비 기반을 플랫폼이 지배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방송 미디어통신의 공공성과 상업성 사이의 구조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음

플랫폼화	알고리즘 편향	시장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디어시장의 플랫폼화는 유통·소비 기반을 플랫폼이 지배하는 구조로 변화</li> <li>-플랫폼 기업들은 콘텐츠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 행사</li> <li>-전통적인 미디어 가치사슬이 해체되고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li> <li>-공공성보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모델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익 극대화 목표가 공론장의 질을 저하시키는 알고리즘 설계로 이어짐</li> <li>-필터 버블과 메아리 울림통 현상으로 정보 편식 심화</li> <li>-이용자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 콘텐츠 우선 노출</li> <li>-허위정보 확산 및 사회적 여론 양극화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자독식 구조로 소수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li> <li>-미디어 다양성 위축 및 공정한 경쟁 질서 훼손</li> <li>-지역 미디어와 소규모 콘텐츠 제작자의 생존 위협</li> <li>-플랫폼 의존도 증가로 미디어의 자율성과 독립성 약화</li> </ul>



### 3. 주요국의 입법현황: 주요국 규범 철학과 거버넌스 개관

	● 미국	● 유럽연합	● 일본	● 한국
규제 철학	Section 230 중심 면책 체계 플랫폼 성장 촉진	공영미디어(PSM) 전통 다층 규범체계 공적 가치 수호	최소 규제 원칙 공동규제(Co-regulation) 사업자 자율 개선 유도	이원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 모색 중 미디어-플랫폼 융합 대응
주요 법제	Section 230 면책 기반 반독점법/FTC 규제 지역저널리즘지원법(계류)	다층 규범체계: AVMSD, DSA, DMA, EMFA 게이트키퍼 규제 강화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공정성 향상법 스마트폰 OS 경쟁촉진법	방송법 vs 전기통신사업법 온플랫폼독법(발의) 디지털미디어법(모색중)

주요국의 미디어 플랫폼 규제 접근: 미국(Section 230 면책) - EU(AVMSD, DSA, DMA, EMFA) - 일본(공동규제) - 한국(이원적 규제 체계)

9

#### (1) EU: 다층 규범체계 개관

유럽의 공영미디어(PSM) 전통과 강력한 정책적 지원

EBU가 정확성·독립성·보편성 등 공영 가치와 디지털 전환 원칙을 제시, 회원국 제도의 기준점 역할

공공성과 시장의 균형을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다층적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AVMSD: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DSA: 디지털 서비스법 DMA: 디지털 시장법 EMFA: 유럽 미디어 자유법

다층 규제의 상보적 접근으로 공공성 확보

##### AVMSD (2018)

VOD 30% 유럽작품 의무

##### DSA (2022)

월 4,500만 명 이상 VLOP

##### DMA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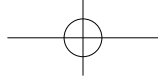
게이트키퍼 규제

##### EMFA (2025)

Regulation: (EU) 2024/1083

2025년 8월 시행

17



## (1) EU: DSA 패키지

### DSA 주요 부과 의무

#### 불법 콘텐츠 삭제

호스팅 제공자에 대해 불법 콘텐츠 신고 메커니즘 구축 의무 부과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판매자 신원확인 의무 부과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정보 제공 의무 부과:

- 분쟁 관련 정보
- 콘텐츠 조정을 위해 사용된 자동화 수단 관련 정보
- 타겟 광고에 사용된 주요 매개변수 등 온라인 광고 정보

-> 모든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조건에 콘텐츠 조정을 위한 정책/절차/조치/수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연 1회 관련 보고서 발간

#### 투명성 강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

- 플랫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리스크 평가/원화/외부감사
- 규정준수 책임자 지정
-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 접근 권한 제공
-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 시스템의 주요 매개변수 공개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 등

18

## (2) 미국: 플랫폼 중심 시장과 규율

**상업 플랫폼 주도 시장** - 스트리밍 점유율 38.8%로 전통 미디어 추월 (Nielsen The Gauge), 뉴스 소비 플랫폼화 (Facebook 30%, YouTube 26%)

Section 230 중심 면책 및 사후규제

**지역 저널리즘 붕괴** - 2022-23년에만 신문 뉴스룸 일자리 약 2천 개 감소, 신문 산업 전체 고용 7천 개 이상 감소, 신문 폐간 127건 (노스웨스턴대 메달 스쿨 State of Local News 2024)

**정책 대안** - Local Journalism Sustainability Act (세제지원), 공공 펀드, 미디어 리더러십 확대 논의

**학계: 언론 등 방송의 특징이 강한 미디어부문을 공공재로 보고 공공투자 확대·정책 개입 요청**

#### 플랫폼 지배력

38.8%

스트리밍 점유율, 전통 미디어 추월

#### Section 230

플랫폼 면책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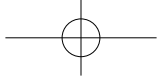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허위정보·선거 논란 이후에도 주로 사후적·사건별 집행(반독점, 소송)

#### 지역 저널리즘 위기

뉴스 사막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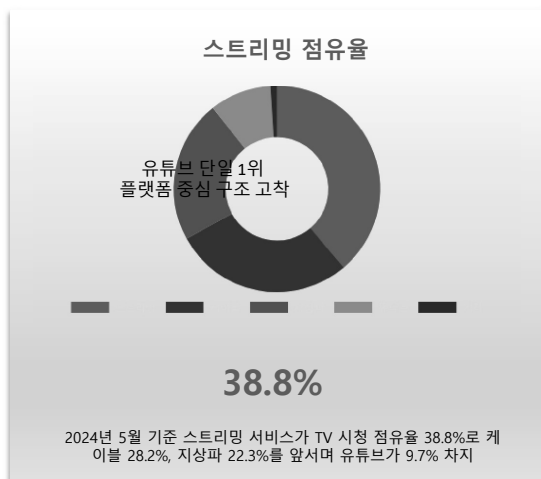
2022-23년 폐간 127건, 일자리 2천 개 감소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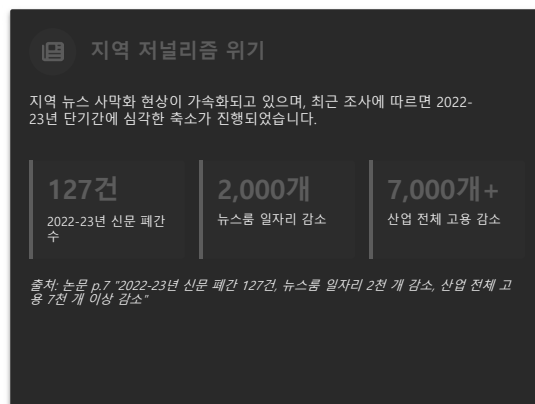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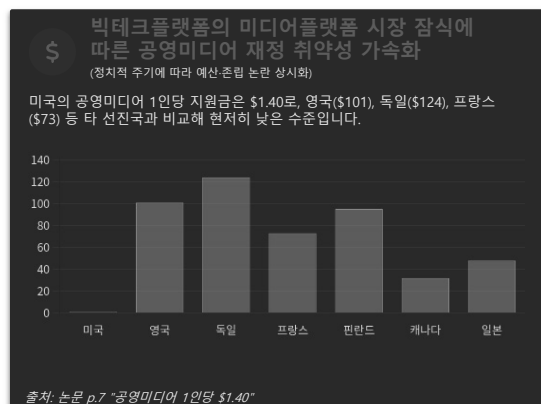
## (2) 미국: 미디어 소비 트렌드

미국 미디어 시장은 상업 플랫폼이 지배적이며, 스트리밍과 소셜미디어가 콘텐츠 유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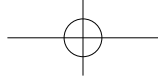


## (2) 미국: 미디어 생태계 위기

미국의 미디어 생태계는 공영미디어 재정 취약성과 지역 저널리즘의 쇠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역 뉴스 생태계의 붕괴는 정보 격차와 민주주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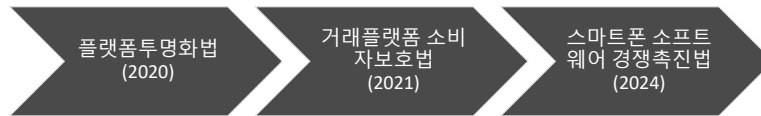


➡ 미국: 혁신과 수익성 잠식이 공존, 규범 논의는 진자처럼 흔들리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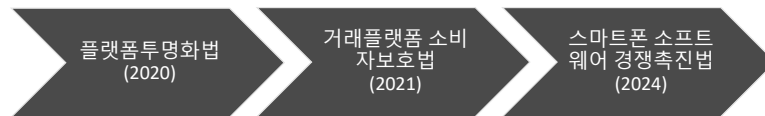
### (3) 일본: 개관

일본은 최근 몇 년간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주요 법안을 제정하였다.



12

### (2) 일본: 미디어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



#### 1. 플랫폼투명화법 (2020년)

목적: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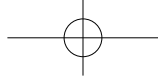
규제대상: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로 지정된 사업자로서 지정 기준은 연매출 규모

규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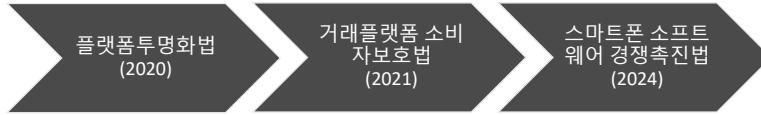
- (1) 거래조건 공개 의무
- (2) 공정성 확보 의무
- (3) 자기평가보고서 제출
- (4) 정부 감독 강화

자율규제 + 공동규제, 위반 시 행정조치 및 벌금 부과 가능

12



### (3) 일본: 미디어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



#### 2. 거래플랫폼 소비자보호법 (2021년)

목적 : 거래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의 이익 보호

규제대상 : 모든 거래플랫폼 제공자 (사전지정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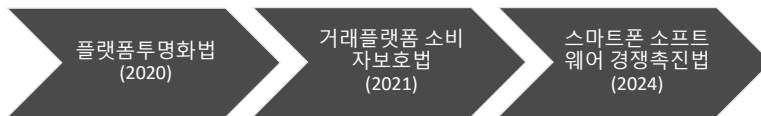
규제 내용

- (1) 거래플랫폼 제공자의 협력 의무
- (2) 행정부 개입 가능
- (3) 소비자 정보 요청 권리

관민협의회를 통하여 정부/플랫폼사업자/소비자 단체 등이 협력하는 **공동규제** 방식

12

### (3) 일본: 미디어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



#### 3.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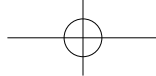
목적 : 앱스토어와 OS 시장의 독점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

규제대상 : 특정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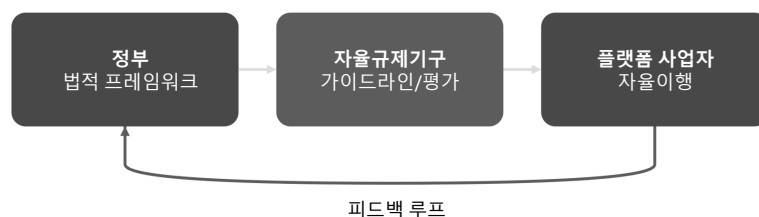
규제 내용

1. 금지사항 : 앱스토어 경쟁 제한 금지, OS기능 제한 금지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금지, 검색 결과 자사 우대 금지
2. 준수사항 : 데이터 취득이용 조건 공개 의무, 이용자 데이터 이전 조치 의무, 브라우저 기본 설정 변경 가능하도록 조치, 앱 설치삭제 시 이용자 동의 확보 의무

12



### (3) 일본: 공동규제 거버넌스(도식)



● 정부/플랫폼 사업자 ● 자율규제기구/피드백

일본의 공동규제(Co-regulation) 모델은 정부의 법적 프레임워크와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결합  
 정부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자율규제기구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개발과 이행을 평가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  
 이러한 접근법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2021)과 스마트폰 특정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2024)에 반영

### (3) 일본: 최소·공동규제 접근

플랫폼에 대한 일본의 경쟁정책은, 지금까지는 '기존 경쟁법 체계 내에서의 대응'을 표방해왔다고 할 수 있음

기본 노선: 정부 가이드라인 + 사업자 자율규제의 공동규제(Co-regulation) 원칙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법 (2021) 2021 대형 플랫폼 지정·의무 부과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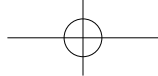
스마트폰 특정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2024) 2024 제3자 앱스토어 허용,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금지

정보유통플랫폼 대처법 개정 최근 불법정보 대응, 자발적 개선 유도

#### 일본 공동규제 핵심 요소



12



## (4) 한국: 개관

2020년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해왔다. 이에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와 소비자 증속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규제 흐름



## (4) 한국: 규제 흐름



### 1. 뉴노멀법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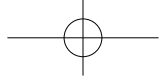
“뉴노멀법”이란,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규범의 창설이라는 의미이다. 2017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로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 특징

- (1) 기간통신사업자의 규제원리를 차용하는 것 (분담금부과, 경쟁상황평가, 회계정리의무)
- (2) 언론사 유사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인한 행위규제를 강화 (모니터링의무, 공익광고의무 등)

#### 비판

-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 기금 충당을 위한 분담금을 플랫폼사업자에게 부과
- 플랫폼서비스의 특성인 탈영토성 및 글로벌성을 반영하지 못함.
- 우리 기업에게만 불리한 결과



## (1) 한국: 규제 흐름



### 2.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2020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안이 2020년 및 2021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 특징

- (1) 적용대상이 광범위 - 사전에 일정 규모의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사전규제의 대상으로 규정
- (2) 거래에 대한 사전규제 - 서면계약서 제공의무, 계약 내용 법정화, 계약 변경 사전통지의무
- (3)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처리에 대한 특칙규정

당시 학계 및 산업계의 반대와 적용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입각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대한 공적 규제 대신 '자율규제'를 정책으로 채택하며 법안 추진이 중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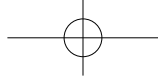
## (4) 한국: 규제 흐름



### 3. 자율규제 (2022~2023년)

2022년 8월 정부가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를 출범하여 4개 분과에서 안건을 논의하였다.

분과	발표내용	세부내용
갑을	오픈마켓 자율규제 방안	-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소비자 이용자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	- 사기쇼핑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혁신공유 민관협력	플랫폼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원칙 이행선언	- 포용성 강화, 사회문제 대응, 신뢰 구축, 안정성 제고 등 주요원칙과 기업별 사례



## (4) 한국: 규제 흐름



### 4.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정부는 자율규제를 채택한지 2년이 되지 않아 공정위가 추진하려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을 지지하며 다시 입장을 바꿨다.

#### 주요내용

- (1) 구체적인 연매출액과 시장 점유율, 이용자 규모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사전 규제
- (2)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끼워평가/자사우대/최혜요구 대우/멀티호밍 등을 제한

## (4) 한국: 입법·정책 평가 및 소결

규제이원화 체계 - 전통 방송(방송법, 허가제)과 플랫폼(전기통신사업법, 신고제)의 분리 규율

쟁점: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 '망 무임승차' 논란

주요 입법 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거래 투명성·공정성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온독법); 시장지배력 남용 억제

미래 방향: 수평적 규제로의 전환 시도 ('디지털미디어법',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논의)

### 현행 규제 체계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 주요 쟁점

규제이원화

동일서비스-동일규제

망 무임승차

### 새로운 입법 시도

온플법

온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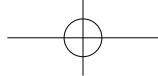
### 미래 방향

디지털미디어법

수평적 규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10



## 4.비교 및 분석: 세 가지 규제 철학의 대비

	미국 (시장/자유주의)	EU (공공성/규범주의)	일본 (공동/실용주의)
규제 철학	Section 230 중심 면책 체계, 플랫폼 성장 촉진	공영미디어 전통 기반, 다층 규범체계, 공격 가치 수호	최소 규제 원칙, 사업자 자율 개선 유도, 공동규제
핵심 기제	Section 230 (안전 피난처), 사후규제 중심	DSA/DMA (차등 책임제), AVMSD, EMFA	특정 디지털 플랫폼 법 (거래 투명화), 스마트폰 OS 경쟁촉진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 우선, 사후규제 중심 (PPT p.13)</li> <li>플랫폼 기업의 기술 혁신 및 성장 극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층 규제의 상보적 접근으로 공공성 확보</li> <li>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공격적 책무 차등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대형 플랫폼만 지정 규제 (혁신 동력 저해 방지)</li> <li>정부 개입 최소화, 유연한 집행</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저널리즘 위기 및 뉴스 사막화 가속</li> <li>독점 기업의 폐해 및 사회적 해악 대응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사 우대, 데이터 접근 등 핵심 문제에 설명 의무에 그쳐 실효성 부족</li> <li>소규모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여 혁신 저해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의 실효성이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li> <li>입점업체를 위한 강력한 사적 집행 단(단체소송 등) 미흡</li> <li>지배력 남용 억제보다 투명성 제고에 초점</li> </ul>



### 미국 모델: 안전 피난처와 레그테크

- Section 230은 플랫폼의 제3자 콘텐츠 책임을 면제
- 안전피난처 제도와 레그테크제도 도입
- 혁신 촉진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 모색



### 일본 모델: 거래투명화

- '특정 디지털 플랫폼' 지정 방식 채택
- 거래조건 투명성 확보에 집중
-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는 한계
- 강력한 사적 집행 수단(단체소송 등) 미흡



### EU 모델: P2P 규정과 실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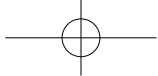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 P2P 규정을 통해 약관법적 접근으로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 보장
- 자사 우대 등에 금지가 아닌 설명 의무에 그침
- 투명성 의무와 알고리즘 설명 책임 강화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력 강화 필요



### 규제 모델 비교 분석

- 미국: 혁신 중시, 사후규제 중심
- EU: 공공성 중시, 사전규제 강화
- 일본: 실용주의적 접근, 최소 규제
- 각 모델의 장단점 조합한 한국형 모델 필요





## 4.비교 및 분석: 세 가지 규제 철학의 대비

### 한국의 법제



한국의 통신미디어 플랫폼 규제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음.

전통 미디어와 플랫폼 간 규제 이원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그리고 수평적 규제로의 전환 시도가 주요 쟁점

#### 규제 이원화와 지체 현상

- 전통 방송(허가제)과 플랫폼(신고제)을 분리하는 규제 이원화 체계 유지
-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적용 어려움
- 규제 지체 현상으로 인한 정책 효과성 저하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낮은 규제 프레임워크

#### 기울어진 운동장(역차별)

- 국내사업자 엄격 규제 vs. 해외 빅테크의 규제 책임 회피
- 국내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및 역차별 심화
- 망 무임승차 논란 등 이원화 체계의 주요 쟁점 파생
-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 부족

#### 수평적 규제로의 전환

- 온플랫폼/온독법 등의 입법 시도
- 디지털미디어법/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논의 진행
- 수평적 규제 전환을 통한 규제 형평성 확보 모색
- 글로벌 규제 흐름을 반영한 체계적 접근 필요

## 4.비교 및 분석: 세 가지 규제 철학의 대비(원칙과 목표)

규제 원칙: 수평규제(서비스 중심), 비차별, 비례·차등책임

정책 목표: 공공성·다양성·혁신·경쟁의 균형적 달성

접근 방식: 수직적·사일로 규제에서 수평적·통합 규제로 전환

KPI 지표: 효과성 측정 및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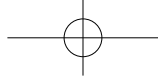
- 신뢰도 - 미디어 콘텐츠 및 플랫폼에 대한 공적 신뢰
- 접근성 -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 다양성 - 소유, 의견, 콘텐츠, 소스 다양성
- 투명성 - 알고리즘, 소유구조, 의사결정 과정

**수평규제**  
서비스 유형 기준 동일 규제

**비차별**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차등책임**  
규모·영향력 비례 의무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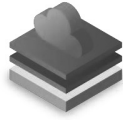


## 4. 비교 및 분석: 세 가지 규제 철학의 대비

제도적 대응 및 정책 방향

플랫폼 시대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공공성과 상업성 간의 구조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

이를 위해 매체 중립적 관점에서 수평적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플랫폼의 규모와 영향력에 따른 차등화된 책임을 부여하며,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

- 매체 중립 관점에서 유사 서비스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규제 형평성 확보
- 전통적인 수직적/사일로 규제 방식에서 수평적/통합 규제 체계로 전환
- 미디어 서비스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일관된 규제 원칙 적용
-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을 통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 규모와 영향력에 따른 차등 책임

-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과 시장 지배력에 비례한 차등 책임 원칙 적용
- 초대형 플랫폼(MOP 벤치마킹)에 대한 엄격한 의무 부과
- 위험 평가 및 위험 완화 조치 의무화
- 중소 플랫폼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로 혁신 촉진

###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설명 의무

- 알고리즘 운영 원칙, 소유구조, 의사결정 과정 등의 투명성 의무화
-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매개변수 공개 및 설명 의무 부과
- 정기적인 외부 감사 및 리스크 평가 시스템 도입
- 공공성 다양성 혁신 경쟁의 균형적 달성에 기여

## 4. 비교 및 분석: 세 가지 규제 철학의 대비

지속가능한 통신미디어  
생태계 조성 전략

법적 규제만으로는 플랫폼 시대의  
미디어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해서는 공적 자원 확대, 공영  
플랫폼 혁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리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공적 자원 및 저널리즘 지원

- 비영리 저널리즘 부문(탐사/지역 뉴스)에 대한 공적 자금 및 직접 지원 확대
- 공영미디어(PSM)의 자원 안정성 및 편집 독립성 보장

### 공영공공 플랫폼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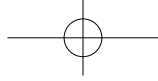
- 이용자 경로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플랫폼 구축 가속화
- 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혁신적 서비스 모델 개발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시민의 비판적 정보 분별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 공적 신뢰도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글로벌 규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초국적 플랫폼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
- EU 등과의 규제 협력 및 정보 공유 네트워크 적극 참여



## 5. 결론 및 정책 제언

### 요약

공공성-상업성 균형을 위한 플랫폼 규제 프레임워크 재설계 필요

수평적 규제와 차등 책임 원칙에 기반한 미디어·플랫폼 정책 체계

국가별 모델: 미국(자유주의·면책), EU(공동체·사전규제), 일본(최소·공동규제)

한국 제언: ①플랫폼 규모별 의무 차등화 ②알고리즘 투명성·감사 ③공영·공공 플랫폼 육성 ④지역·다양성 지원

핵심 가치  
공공성 · 다양성 · 혁신 · 경쟁

규제 철학  
수평적 규제 + 차등 책임

정책 방향  
알고리즘 투명성 &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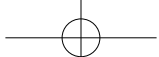
한국형 모델  
공공 플랫폼 + 지역 다양성

21

# 감사합니다

✉ lawknp@police.ac.kr

✉ lawwisc@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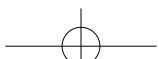
### 주제발표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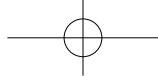
##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전략



**강형구** 교수  
(한양대학교)

##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





##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전략

포용적 성장에서 플랫폼의 중요성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공대 컴퓨터이셔널 파이낸스공학과 교수  
Korea Business Review editor-in-chief

February 9, 2026

Navigation icons and page number 1/29

## 핵심 주장 (Core Thesis)

### 주장 (Claim)

디지털 플랫폼은 거래비용 절감, 신뢰 형성, 도구(tool)와 금융의 결합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견인하나, 역량 격차, 거버넌스 미비, 멀티호밍 부담 등 해결도 필요.

### 시사점 (So-what?)

따라서 전략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Go Digital)'이 아닌, '**플랫폼 포트폴리오 + 역량 강화 + 안전장치(Guardrails)**'의 입체적 설계.

Navigation icons and page number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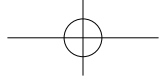












## 플랫폼과 국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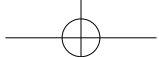
Kang et al. (2022)	Kang et al. (2024)	AI 중심의 국방 생태계
콘텐츠 및 서비스	앱 개발자	군사 단위 (항공기, 전차, 보병부대)
메타 정보	기술 파트너	데이터 통합자 및 분석가
앱 스토어	앱 스토어	국방 플랫폼 및 마켓플레이스
운영 체제	기초 모델 및 플랫폼	중앙집중형 AI 시스템("스카이넷"형 통제 시스템)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국방 클라우드 인프라
인프라	칩 제조업체	국방 하드웨어 인프라 (예: AI 최적화 프로세서, 네트워크 시스템)

Navigation icons and page number 28 / 29

## References I

- 📄 Kang, H.-G., Kang, C.-M., & Jeon, S. M. (2022). An innovative framework to classify online platforms. *The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31(1), 59–90.
- 📄 Kang, H.-G., Moon, A., & Jeon, S. (2024). Examining th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landscape: Current status and policy strategies.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34(1), 150–190.

Navigation icons and page number 29 / 29



2026년 공동 정책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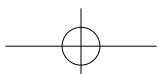
## 패널토론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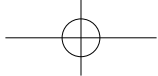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



**정주연** 선임전문위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





##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

토론문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오늘날, 우리 플랫폼 산업을 단순한 거래 중개자가 아닌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전략 수립은 이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시는 전성민 교수님, 정혜련 교수님, 강형구 교수님의 고견에 깊이 공감하며, 본 토론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실과 최근 규제 환경이 갖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플랫폼은 이제 AI 생태계의 중심축입니다.

생성형 AI의 확산은 플랫폼의 역할과 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더 이상 이용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단순한 중개 수단이 아니라, **데이터가 축적되고 학습되며 서비스로 구현되는 AI 생태계의 실질적인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데이터의 흐름과 활용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환경에서, 플랫폼은 AI 주권과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적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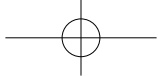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이러한 인식은 이미 주요 국가들의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틱톡 사례에서 드러나듯,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간주하며 자국 자본 중심의 지배구조 전환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EU는 DMA·DSA를 통해 대형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규제 권력을 활용해 미국·중국 빅테크를 견제하며 자국 디지털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AI는 진흥, 플랫폼은 규제’는 정책 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책 환경은 여전히 **‘AI 산업은 진흥하고, 플랫폼 산업은 규제한다’는 이분법적 접근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별 기업의 보안 사고가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리로 확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서 시작된 점검이 거래 구조, 결제-정산 체계, 계약 방식, 종사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 등으로 확대되며, 플랫폼 산업 전체가 마치 잠재적 통제 대상이자 위협 요인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는 디지털 환경에서 플랫폼이 제공해온 편익과 혁신 성과를 외면하고, 오히려 산업을 과거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규제의 부담은 스타트업이 먼저 집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규제 논의의 중심이 ‘사후 책임’에서 ‘사전 의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온플법’은 매출액 100억 원 또는 총 판매금액 1,000억 원 이라는 낮은 문턱을 기준으로 고강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규모와 위험도가 전혀 다른 기업들을 하나의 규제 틀로 묶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에게는 그저 ‘관리 가능한 비용’일 수 있는 규제가, 스타트업에게는 제품 고도화와 고객 확보에 썩어야 할 자원을 행정 대응에 우선 투입하게 만드는 ‘생존의 위기’가 됩니다. 정교한 설계 없이 일괄적 규제를 적용할 경우, 규제의 그물에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자본력이 부족한 혁신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 성장하는 순간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초기 시장 확대를 위해 '계획된 적자'를 감내하는 혁신 플랫폼에 대해 거래 규모만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되어 과징금이나 감독 대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규제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유니콘, 데카콘 등을 꿈꾸는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유리천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성장은 '도전'이 아니라, '위험 회피'의 대상이 되는 구조적 역설이 빠질 수 있습니다.

## 불확실한 규제가 더 큰 위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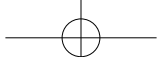
규제의 절대적인 양보다 더 치명적인 리스크는 '예측 가능성의 상실'입니다. 스타트업은 본래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성장하지만,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경쟁 환경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책과 규제의 방향이 수시로 흔들리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은 고객 가치나 기술 혁신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 회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할 때 '이 기능이 사용자에게 필요한가?'보다 '이것이 나중에 규제에 걸리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는 순간, 혁신은 과감한 도전이 아니라 소극적인 회피의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생태계 전체의 도전 의지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일률적 규제는 후생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플랫폼은 단순히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체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해 온 혁신 주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네이버의 '빠른 정산' 사례에서 보듯, 플랫폼의 자율적 상생 노력을 통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이자 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보다 민간의 자율적 혁신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 주거나 수수료율을 법으로 일률 통제할 경우, 플랫폼의 비용 구조는 사라지지 않고 광고비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로 전이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낳게 됩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확인된 것처럼 이는 결국 소비자 요금 인상과 후생 저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니다.

## 규제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결국, 플랫폼 산업은 AI·데이터·디지털 수출을 아우르는 핵심 산업입니다. **AI 진흥과 플랫폼 규제를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데이터-플랫폼-AI를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인식하고 통합적인 산업 전략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등 혁신 기업이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 속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상생과 수출이라는 이중 목표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규제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산업 전략이며, 지금이 바로 그 방향을 다시 짜야 할 시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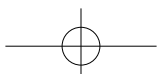
## 패널토론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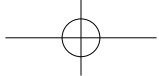
#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



최영근 교수  
(상명대학교)

# 상생-수출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법률과제





## 「국가플랫폼자본주의(SPC): 글로벌 플랫폼 주권 전쟁」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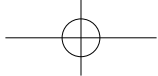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전성민 교수님의 발표는 디지털 플랫폼을 더 이상 민간 기업 차원의 혁신 주체로 보지 않고, 국가 주권·안보·지정학의 핵심 인프라로 재개념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미국의 틱톡 강제 매각, EU의 DMA/DSA, 일본의 라인아후 사태를 하나의 이론적 틀, 즉 \*국가플랫폼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SPC)\*로 통합하여 설명한 점은 최근 파편적으로 논의되던 글로벌 플랫폼 규제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학술적 기여를 지닌다

본 발표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플랫폼의 ‘국적화(nationalization)’와 ‘안보화(securitization)’가 예외가 아니라 규범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틱톡 사례에서 보듯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더 이상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감독해야 할 전략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과 기술 중립성이라는 기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전제를 근본적으로 흔든다. 특히 미국 대법원이 틱톡 강제 매각을 합헌으로 판단한 것은, 시장 논리가 아니라 안보 논리가 플랫폼 거버넌스의 최상위 규범으로 자리 잡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토론자로서 제기하고 싶은 비판적 질문은, SPC가 과연 불가역적·보편적 경로인가라는 점이다. 발표에서는 미국·EU·일본의 사례가 모두 SPC의 변주로 해석되지만, 이들 국가의 규제 논리는 상당한 이질성을 지닌다. 미국은 민간 빅테크와 안보 국가의 결합이라는 ‘공격적 SPC’를, EU는 자국 기업 부재 상황에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재설계하는 ‘방어적 SPC’를, 일본은 행정지도와 공동규제를 통한 점진적 ‘플랫폼 국유화’에 가까운 방식을 취한다. 이는 SPC가 단일한 체제라기보다 국가의 산업 구조, 기술 역량,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다층적 전략 조합임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에 대한 함의와 관련하여, 발표가 제시한 ‘소버린 AI 중심의 전략적 전환’은 설득력이 크지만, 동시에 국내 규제체계의 내적 모순을 충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 즉, 국내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면서 해외에서는 플랫폼 주권을 주장하는 이중 전략이 지속될 경우,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토종 플랫폼은 국제 경쟁과 국내 규제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SPC 시대에 국가가 ‘심판’이자 ‘플레이어’가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정책 딜레마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발표는 글로벌 플랫폼 질서의 구조적 전환을 설명하는 매우 강력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SPC 하에서 중견국(middle power) 플랫폼 국가의 생존 전략, 그리고 국가 개입이 혁신 역량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추가된다면 이론적·정책적 완성도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 「K-플랫폼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방안과 도전」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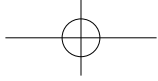
정혜련 교수님의 발표는 통신·미디어 플랫폼을 둘러싼 주요국의 규제 철학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플랫폼의 해외 진출이 직면한 제도적 도전을 분석한다. 특히 미국, EU, 일본, 한국을 각각 상이한 규범 철학과 거버넌스 모델로 대비시킨 점은 정책 논의를 감정적·정치적 차원이 아닌 제도 설계의 문제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발표의 핵심 논지는 플랫폼 규제가 단순히 ‘강하다/약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공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이다. 미국은 Section 230을 중심으로 혁신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후 규제 모델을 유지하는 반면, EU는 공공성·다양성·공정경쟁을 제도적으로 강하게 보호하는 사전 규제 체계를 구축하였다. 일본은 이 둘의 중간 지점에서 최소 규제와 공동규제를 결합한 독특한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교는 한국이 어느 모델을 ‘모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규범 조합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전략적 질문을 제기한다.

다만 토론자로서 주목하고 싶은 쟁점은, 한국 규제 논의가 여전히 ‘국내 질서 교정’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발표에서 지적하듯,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나 플랫폼 경쟁촉진법 논의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비대칭 경쟁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국내 사업자에 규제 부담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K-플랫폼의 해외 진출 역량을 약화시키는 자기모순적 정책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논점은 미디어 플랫폼의 공공재적 성격이다. 발표는 알고리즘 편향, 가짜뉴스, 여론 양극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반드시 강한 법적 규제에만 귀결되어야 하는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공동규제 사례가 시사하듯, 일정 수준의 자율규제와 투명성 메커니즘을 제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 역시 공공성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발표는 K-플랫폼의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함에 있어 규제는 제약이자 동시에 경쟁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향후 정책 논의에서는 국내 규제의 정합성뿐 아니라, 해외 규제 환경에 대한 ‘적응 역량(regulatory capability)’을 플랫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관점 전환이 요구된다.



##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전략」

토론문

강형구 교수의 발표는 디지털 플랫폼을 대기업 독점이나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던 기존 담론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포용적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증적이고 정책 친화적인 기여를 한다. 특히 글로벌 사례와 계량적 연구 결과를 결합하여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생산성, 고용, 시장 접근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한 점은 인상적이다

발표의 강점은 디지털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새로운 부담을 발생시킨다는 ‘확산의 역설’\*\*을 균형 있게 제시한 데 있다. Shopify, Amazon, YouTube, Gojek 사례는 플랫폼이 소규모 사업자를 ‘마이크로 다국적 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멀티호밍 부담과 디지털 역량 격차는 소상공인이 플랫폼 생태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토론 차원에서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이러한 플랫폼 기반 포용적 성장이 어떤 조건 하에서 지속 가능해지느냐이다. 발표는 교육, 금융 지원, 원스톱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인센티브 구조가 소상공인의 장기적 역량 축적과 반드시 일치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즉, 단기 매출 증대는 가능하더라도, 플랫폼 종속이 심화될 경우 소상공인의 자율성과 교섭력은 오히려 약화될 위험이 있다.

또한 정책적 관점에서, 발표가 제안한 ‘국내 플랫폼 생태계 육성’ 전략은 SPC 논의와도 연결된다. 글로벌 플랫폼이 국가 단위의 규제와 주권 논리 속에서 재편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친화적 국내 플랫폼은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경제 안보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 정책과 플랫폼 정책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통합적 디지털 산업 전략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본 발표는 디지털 플랫폼 논의에 인간적·사회적 차원을 복원시키는 중요한 시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플랫폼 참여가 소상공인의 장기 생존율, 기술 학습 효과, 협상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중 단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포용적 성장 논의의 실증적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